

자조금 활성화로 생존방안 모색



▲ 김성구 사무관

- 1996 건국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 1996 농림부 축산국 임용
- 2003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2004 농림부 축산국
- 2010 농림수산식품부 국제협력국(지역무역협정과)
- 2012.6~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기금담당

지난 6월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가금담당에 김성구 사무관이 선임되었다. 가금산업 전체적으로 불황에 직면해 있는 시기에 가금담당으로 오면서 김성구 사무관의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본고는 폭염피해 현장 방문은 물론 양계산업 수급 등 양계산업 활성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김성구 사무관을 만나 양계산업에 대한 발전방안을 들어보았다.

불황 극복에 노력

김성구 사무관은 건국대학교 축산과를 졸업하고 1996년 농림부 축산국 근무를 시작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부 국제협력국 등을 거치면서 가금은 물론 축산업에 대해 다방면에서 업무역량을 넓혀갔다. 농림부 근무 초기에 이미 양계담당 주무관을 맡은 경험 이 있기 때문에 가금업무에 생소하지 않다는 김 사무관은 과거 가금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금산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주었다.

김성구 사무관은 양계산업 전체적으로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정부에서는 렌더링 및 노계도태 장려금 등을 지급,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생산자

단체 및 자조금 사무국과 협의하고 있지만 원천적으로 사육수수를 늘려온 생산자들도 책임을 공감하고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가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일부에서 과잉생산의 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금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농장이 아직도 많이 있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설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무분별하게 닭 수수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계인들로부터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수제한 문제 등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나간다는 입장이다.

양계자조금 거출확대 모색

김성구 사무관은 양계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으로 양계자조금 사업 활성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 시행, 한·중 FTA 협상에 따른 농가 피해 최소화에 역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양계자조금에 대해서는 처음에 양계분야에서 가장 원활하게 추진되어 온 것이 자조금이지만 지금은 타 축종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한게 사실이기 때문에 자조금을 안정적으로 거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닭고기와 계란을 생산자 자율적으로 수급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정부에서도 농가 홍보 및 거출확대를 위해 함께 힘써나갈 뜻을 밝혔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은 현재 내년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을 만드는데 집중을 하고 있

다. 이 법을 통해 생산자와 계열사들 간에 상생 무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 각 단체 등과 장기간 문제점을 고민하여 만든 법률인 만큼 효과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을 확신하였다.

한·중 FTA 양계피해 최소 노력

양계농가에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한·중 FTA는 이미 2차협상까지 진행된 상태이다. 축산경영과에서 한·중 FTA 축산분야 총괄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더욱 신경을 써야하는 사안이다.

김성구 사무관은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축산분야를 민감품목으로 분류하여 협의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김성구 사무관은 시장개방 확대와 관련하여 닭고기 수입 증가만을 걱정할게 아니라 국내산 닭고기의 강점을 살리고 오히려 특수시장을 개척한다면 수출을 통해 충분히 양계산업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국내에서도 충분히 대형닭고기 생산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경쟁력도 충분히 있다는게 김 사무관의 말이다.

김성구 사무관은 과거 IMF 위기는 물론 AI 등 각종 시련을 겪어오면서도 양계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많은 발전과 변화가 이어져왔다고 평가하고 배우는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양계인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농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임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본회가 다른 가금단체를 규합하는 대표적인 단체인 만큼 생산자와 정부간에 원활한 소통을 이룰 수 있도록 중간 다리역할을 해주길 당부하기도 하였다.

(취재 | 김동진 편집장, djkim300@hanmail.net)